

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

(2017. 12. 제정)

□

목차

- [1 제1장 총칙](#)
 - [1.1 제1조\(목적\)](#)
 - [1.2 제2조\(정의\)](#)
 - [1.3 제3조\(적용범위\)](#)
 - [1.4 제4조\(구성\)](#)
- [2 제2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](#)
 - [2.1 제5조\(사건처리의 원칙 및 절차적 권리의 보장\)](#)
 - [2.2 제6조\(사건의 신고와 접수\)](#)
 - [2.3 제7조\(사건의 조사\)](#)
 - [2.4 제8조\(사건의 처리\)](#)
 - [2.5 제9조\(각하\)](#)
 - [2.6 제10조\(조사종결처분\)](#)
 - [2.7 제11조\(임시조치\)](#)
 - [2.8 제12조\(센터장에 의한 조정\)](#)
 - [2.9 제13조\(인권구제 및 예방조치 등\)](#)
- [3 제3장 인권심의위원회](#)
 - [3.1 제14조\(구성\)](#)
 - [3.2 제15조\(업무\)](#)
 - [3.3 제16조\(회의\)](#)
 - [3.4 제17조\(제척 및 기피\)](#)
 - [3.5 제18조\(징계요청\)](#)
- [4 제4장 기타](#)
 - [4.1 제19조\(당사자의 권리\)](#)
 - [4.2 제20조\(불이익 금지\)](#)
 - [4.3 제21조\(관계부서의 협력의무\)](#)
 - [4.4 제22조\(비밀유지\)](#)
 - [4.5 제23조\(내규\)](#)
- [5 부 칙](#)

제1장 총칙

가진다.

③ 센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모든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.

1. ○○ 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 ○○
2. 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
3. ○○ 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

④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⑥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시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.

⑦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,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.

제6조(사건의 신고와 접수)

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.

⑤ 센터는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.

제7조(사건의 조사)

①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.

② 센터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사건의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1. ○○○○ ○○ ○○○○ ○○ ○○ ○○, ○○ ○○ ○○ ○○○ ○○ ○○
2. ○○○, ○○○ ○○ ○○○○ ○○ ○○○ 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 ○○ ○○ ○○
3. ○○○, ○○○ ○○ ○○○○ ○○ ○○○ 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 ○○ ○○○ ○○
4. 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, ○○ ○○ ○○ ○○ ○○ ○○○○

④ 제1항 진술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계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건의 처리)

① 센터장은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1. □□
2. □□□□□□
3.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
4.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 □□□□
5. 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

②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각하)

① 센터장은 다음의 사건은 각하한다.

1. □□□□ □6□ □1□□ □□□ 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
2.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
3. □6□ □4□□ □6□ □5□□ □□□□ □□
4. 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

② 각하처분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조사종결처분)

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종료로서 사건을 종결한다.

1.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
2. 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
3.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

② 조사종결처분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임시조치)

센터장은 인권구제조치의 긴급한 필요한 있는 경우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,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1. 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
2.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, □□ □ □□□□
3. 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

제12조(센터장에 의한 조정)

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위원회 소집 이전에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조정인을 선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건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
③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.

④ 기타 조정에 관련된 것은 내규로 정한다.

제13조(인권구제 및 예방조치 등)

① 센터장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에 대하여 사과 권고, 교육이수, 봉사, 접근금지, 기타 사건해결에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제조치를 할 수 있고, 해당 부처에 대하여 제도·정책·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, 예방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전항의 구제조치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③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사건을 인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
제3장 인권심의위원회

제14조(구성)

① 본교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에 각각 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인권심의위원회는 서울, ERICA 양 캠퍼스별로 교수, 직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⑤ 인권심의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제15조(업무)

인권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○○○○ ○○○ ○○ ○ ○○
2. 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 ○○○○
3. ○○○ 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

제16조(회의)

①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사건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인권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.

③ 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7조(제척 및 기피)

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업무에서 제척된다.

1. ○○ ○○ ○○○ ○○ ○○○○○ ○○○ 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 ○○
2. 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

3. 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

②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장은 제척 및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하며, 제척 및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.

제18조(징계요청)

① 인권심의위원회의는 사건당사자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징계기관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인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징계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○○ ○○ ○○○○○ ○○ ○ ○○ ○○ ○○○○ ○○ 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
2. 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 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
3. ○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 ○○ ○○
4. ○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
5. ○○○○ ○○ ○ ○○○○ ○○○○ ○○

③ 징계요청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를 담은 징계요구서를 해당징계기관에 송부해야한다.

④ 징계요구는 인권심의위원회의의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,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 요구된 사람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기관에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징계요청을 받은 해당 징계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야 하며, 징계위원회의의 최종 결정 사항을 7일 이내에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장 기타

제19조(당사자의 권리)

① 당사자는 센터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.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.

제20조(불이익 금지)

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, 진술, 증언,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라는 이유만으로 해고, 전보, 징계, 부당한 대우,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21조(관계부서의 협력의무)

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2조(비밀유지)

① 센터장, 연구원, 직원, 심의위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 ② 센터장, 연구원, 직원, 심의위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
제23조(내규)

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「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」은 폐지한다.